민주정부 10년,

대한민국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국정보고서

대통령비서실

청와대브리핑(www.president.go.kr)에 실린
〈선진국 도약의 10년〉 자료를 보시면
'민주정부 10년'의 국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우리는 국가부도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문턱까지 왔습니다.
청산할 건 청산하고 할 일은 한 개혁의 결과입니다.
그 10년 동안의 땀과 성과 위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0년 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 02
민주정부 10년의 성적 ---------- 04
민주정부의 개혁 10년 ---------- 06
민주정부 10년, 오해와 진실
1 한국경제와 국가경쟁력 ---------- 08
2 일자리 ---------- 09
3 양극화와 민생 ---------- 10
4 교육 ---------- 12
5 부동산 ---------- 13
6 평화와 공동 번영 ---------- 14
7 민주주의의 힘 ---------- 15

민주정부 10년,
국가부도 위기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 '잃어버린 10년' +

지난 10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문에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엉망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 부패세력, 부패문화가 목청을 높이기까지 합니다.
민주주의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국민들이 선택한 민주정부는
독재정권보다 못한 무능한 정부라고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 두 번의 폐허, 두 번의 기적 +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두 번의 폐허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1950년 한국전쟁이고, 두 번째는 10년 전 국가부도입니다.
1997~98년에 걸쳐 4만개의 기업이 부도나고 100만명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우리 모두 자부심도,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가난을 극복한 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다면
국가부도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은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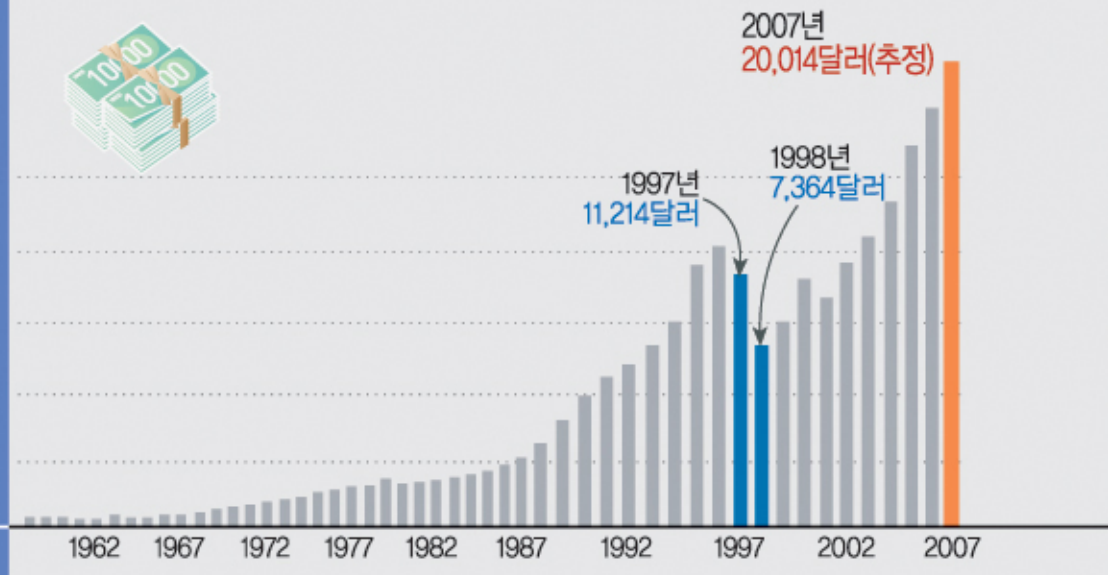
+ 대한민국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들 중 가장 빨리 극복했을 뿐 아니라
경제규모 세계 12위, 국가경쟁력 11위, 지식정보강국의 선진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지난 10년의 개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 땀과 노력을 매도하고 그 이전이 좋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선동이라도 부도덕한 일입니다.
관치와 정경유착, 편법과 반칙으로 국가부도를 초래한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야할 미래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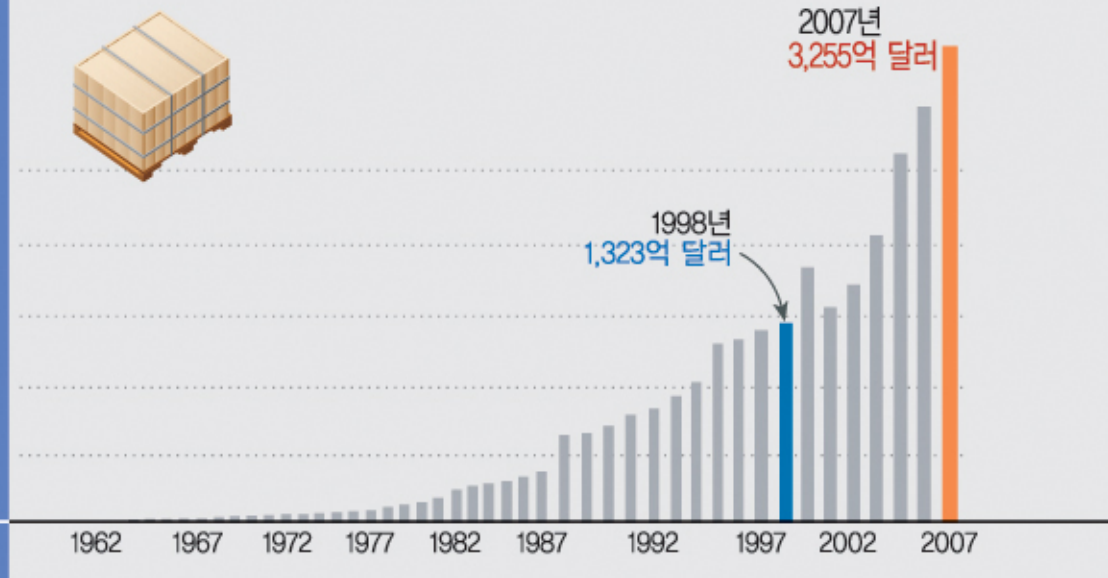
민주정부 10년의 성적,
사실과 지표가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국가부도,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잃었는지 그 이후 10년,
잃은 것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얼마나 더 치고 올라갔는지
사실과 지표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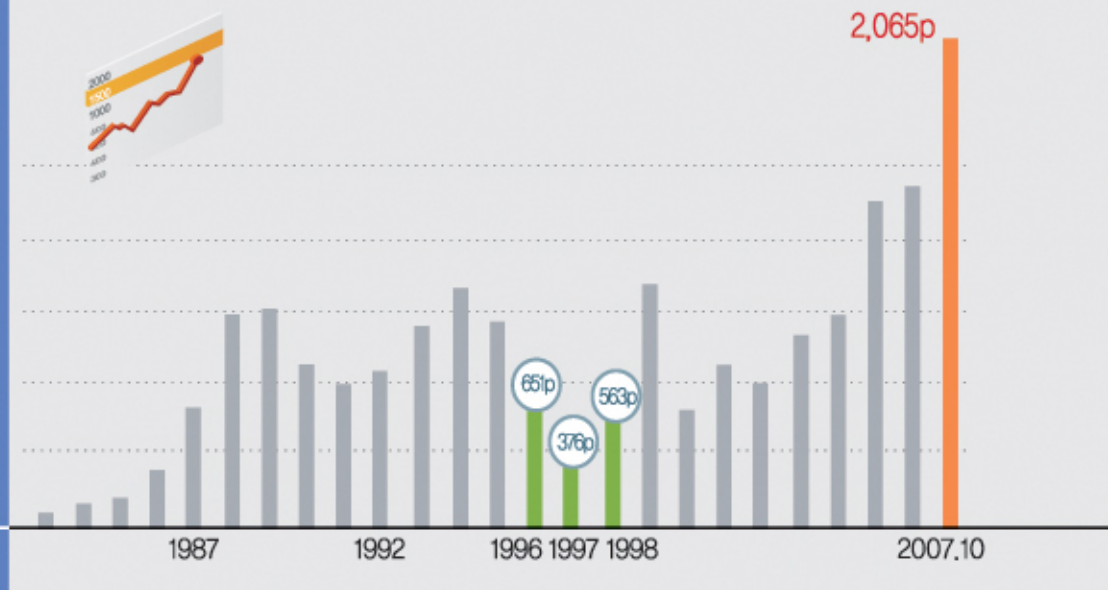
1인당 국민소득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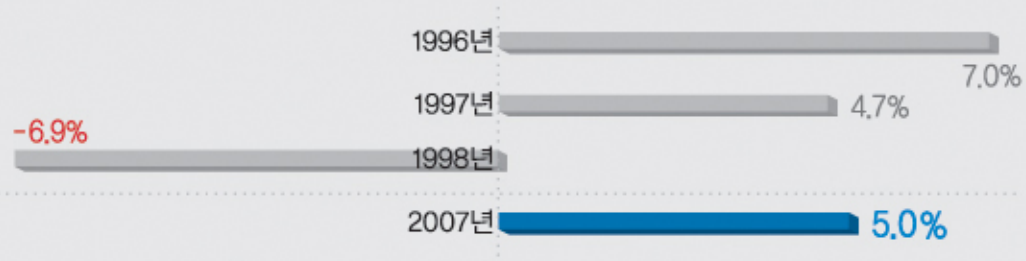


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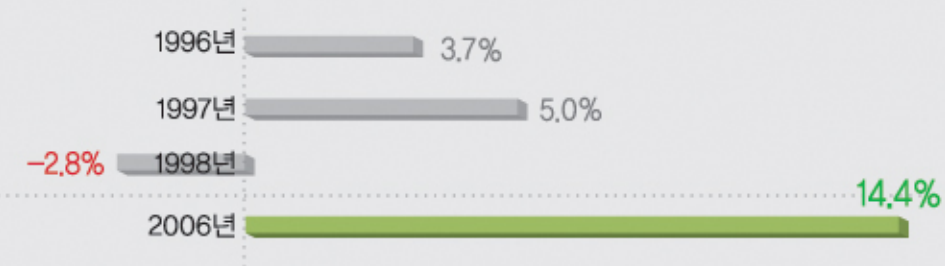


어떤 지표를 갖다놓아도 분명합니다. 지난 10년,
올라가야 좋은 건 올라갔고, 떨어져야 좋은 건 떨어졌습니다.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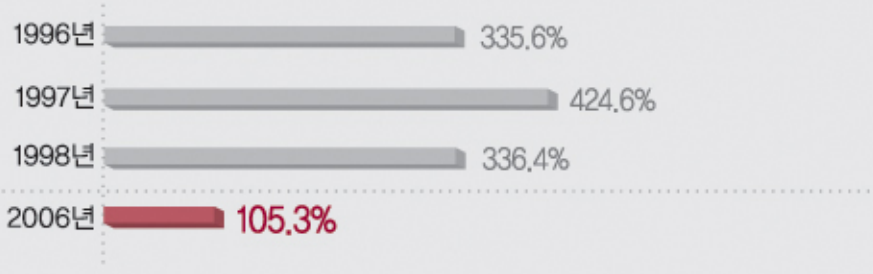
연도별 수출증가율
(통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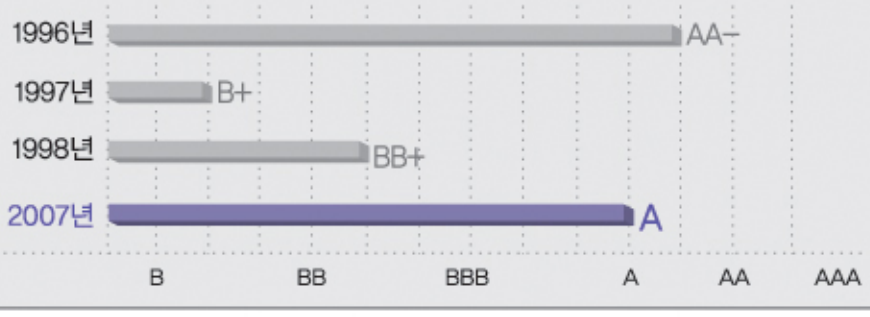
외환보유고(억 달러)

연간부도업체수

기업부채비율



국가신용등급추이
(S&P)



민주정부의 개혁 10년,
청산할 건 청산하고, 할 일은 했습니다

+ 민주주의 +

권위주의와 특권 · 유착을 청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렸습니다.
대통령은 제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정권 안보' 에 동원됐던 국가기관들도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선거는 투명해졌고 돈정치, 권력형 비리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개혁이 없었다면 시장경제의 발전도, 한반도 평화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시장경제 +

정경유착과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민주적 시장경제를 정착시켰습니다.
권력에 줄 대서 은행 돈 빌리거나 특혜를 받아 부당하게 성장하는 기업은 이제 없습니다.
기업경영과 시장 경쟁도 공정해지고 투명해졌습니다.
지난 10년, 민주적 시장경제가 뿌리내리지 않았다면 우리 기업이
권력과 관치의 그늘에서 벗어나 세계일류기업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 성장과 복지 +

성장제일주의, 강자독식을 반대하고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사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진작부터 했어야 할 일입니다.
1990년대 초반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흐름이 거세질 때
이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준비하고 투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만 잘하면 복지는 저절로 해결된다며 소홀히 했습니다.
복지투자 없이는 민생의 양극화를 막을 수 없고,
양극화로 민생이 어려워지면 기업도 계속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정부에서 처음으로 복지정책의 틀을 잡고 참여정부에서 내용을 채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쪽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 평화 +

항상 대결과 적대로 불안했던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는 시대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기대해도 좋을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북미관계는 물론 주변국들의 긴장과 대립이 가장 첨예했던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일관된 평화의지와 노력으로 이끌어낸 성과입니다.
그 노력이 없었다면 정전체제 종식과 북방경제 등 한반도의 지각변동 속에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일본을 뒤따라가는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의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되던 60년 전 비극의 역사는
이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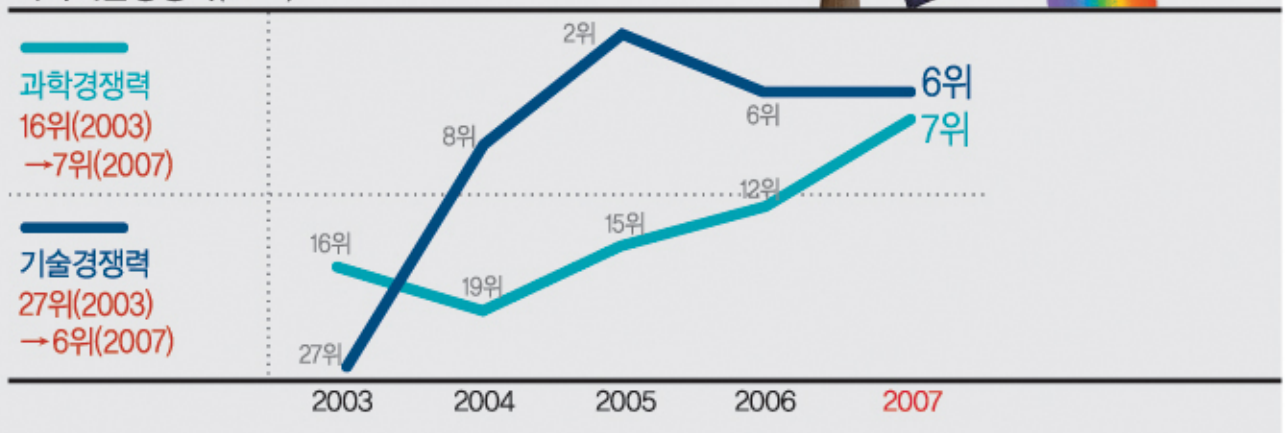
민주정부 10년, 오해와 진실

국내에서는 '경제파탄론'이 유행이지만
국제사회는 국가경쟁력 11위 선진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01: 한국경제와 국가경쟁력

국내 일부에서는 한국경제가 파탄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이 2025년에 세계 9위, 2050년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을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세계 11위 (2007년, 세계경제포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 지난 5년 동안(2003년~2007년) 40.7조 원
1980년~2002년 13년 동안의 투자규모 39.7조 원

이제 성장만으로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장, 복지와 함께 가는 성장이 중요합니다.

02: 일자리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선진경제로 진입함에 따라
경제가 성장해도 예전만큼 일자리가 늘지 않습니다.
기업생산이 10억원 늘어날 때 생기는 일자리 수가
1990년 68명, 2000년 41명에서,
2005년에는 31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일본은 14명, 독일 13명, 미국 11명 수준입니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입니다.
앞으로 선진경제로 갈수록
성장만으로는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성장이냐가 중요합니다.
일자리 수가 많은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합니다.
보육, 간병, 식품안전, 환경 등 국민 복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야 합니다.
고용지원서비스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20만 개 늘어나고,
고용보험 확대, 고용지원서비스 · 직업훈련의
선진화 등 직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부도로 빚더미를 넘겨받은 이후
더디지만 조금씩 조금씩 **극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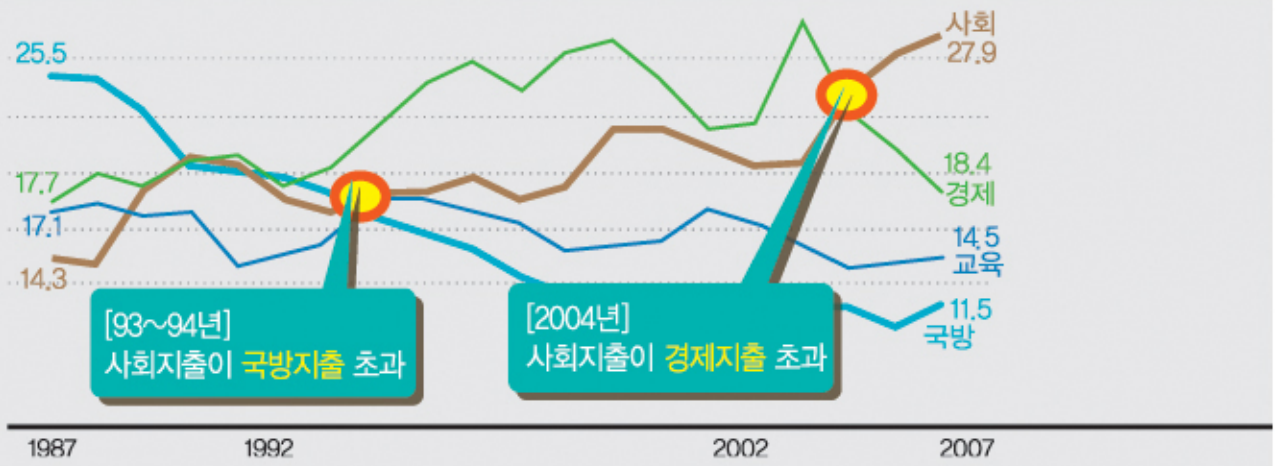
03 : 양극화와 민생

경제지표는 좋은데 민생은 힘들다고 합니다. 양극화 때문입니다.
세계화, 지식정보화, IMF 경제위기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쉽지 않은 숙제가 되었습니다.
양극화로 인한 민생문제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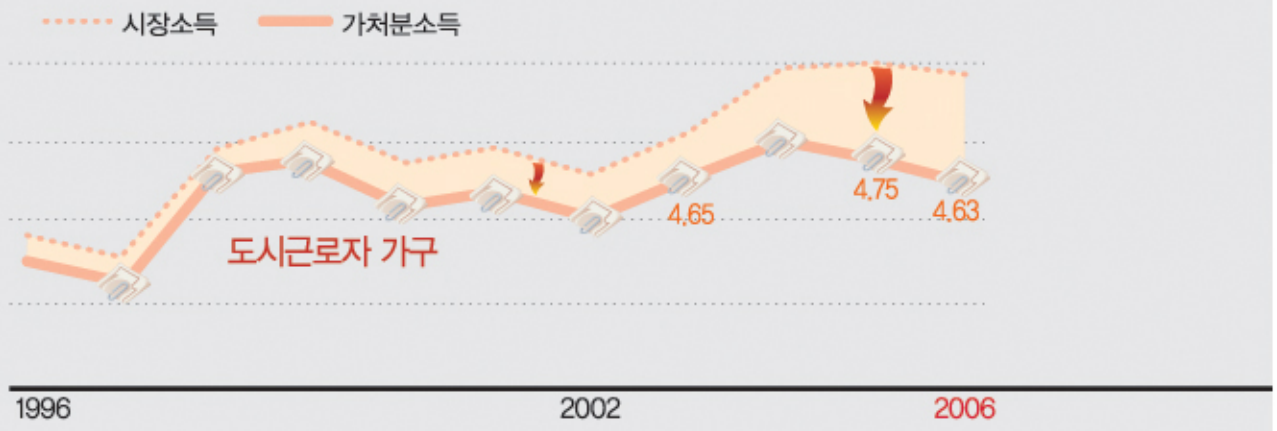
지난 10년, 양극화 극복을 위한 복지투자를 강화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복지정책의 뼈대를 세웠고
참여정부에서는 정부예산 중 복지사회지출 비중을
20%에서 28%로 끌어올렸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정부예산 중 복지사회지출(사람투자)이
경제지출(시멘트 투자)보다 많아졌습니다.

당장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2005년 이후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중 복지사회지출 비중(%)



소득불평등 개선 추이(소득 5분위 배율)



소득 5분위 배율 :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몇 배나 되는지 비교한 지표.
숫자가 적을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 위쪽의 점선은 시장소득의 5분위 배율
- 아래 실선은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이후 사람들의 손에 실제 들어오는 가처분소득의 5분위 배율
- 둘 간의 차이는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나타냄. 차이가 커질수록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대학입시가 없어지면
우리 교육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04: 교육

공교육이 경쟁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실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여전히 사교육비가 걱정입니다.
방과후학교 등 근본 대책을 추진해왔고
사교육비 증가세가 줄고는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문제는 대학입시입니다.
시험성적 위주의 대학입시를 고치지 않고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본고사를 묶고 수능시험을 등급제로 전환했습니다.
학교교육과 다양한 적성을 반영하는
내신 중심의 선진국형 대입제도를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지만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시험성적 위주의 대학입시는 없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본고사 자율화, 자립형사립고 확대 등으로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입시지옥으로 몰아가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학업성취도 국제평가

미국연구소 (ARI) 조사
→ 수학, 과학 학업성취도 세계 3위 (2007, 중학생)

OECD 주관 학업성취도 조사 (PISA)
→ 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2위, 과학 3위 (2003, 고등학생)

국제수학과학능력평가 (TIMSS)
→ 수학 2위, 과학 3위 (2003, 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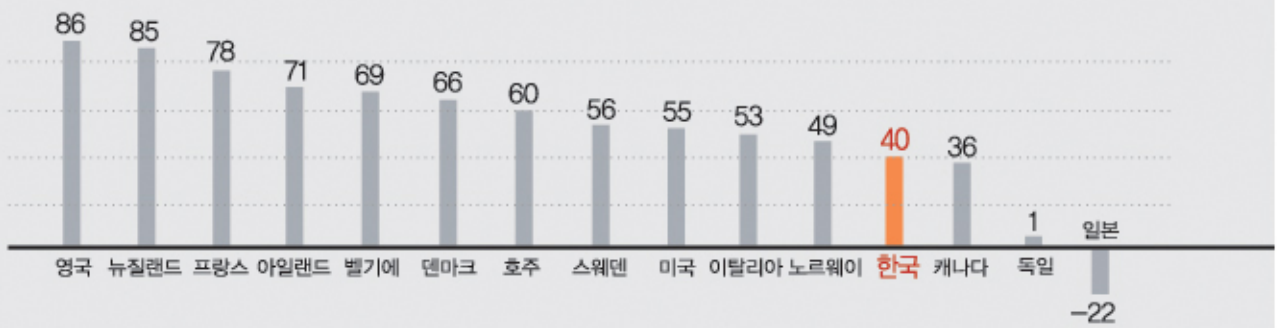
일찍 잡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대책은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05: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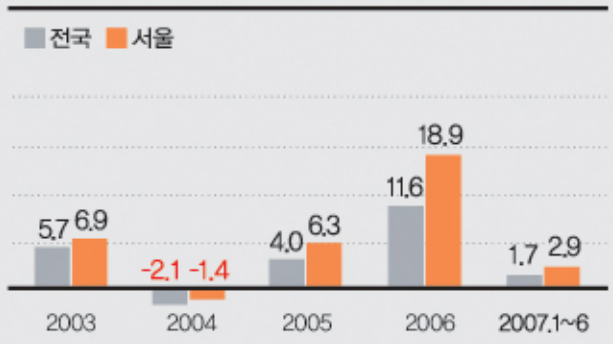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안정되고 있지만, 일찍 잡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 주요국의 집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고 돈이 많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 외국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일시적 경기부양 등 단기 처방에 매달리지 않고 보유세 강화,
부동산 거래 실명화 등 근본적 부동산 안정대책을
5년 내내 일관되게 밀어붙였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림 없이 오래 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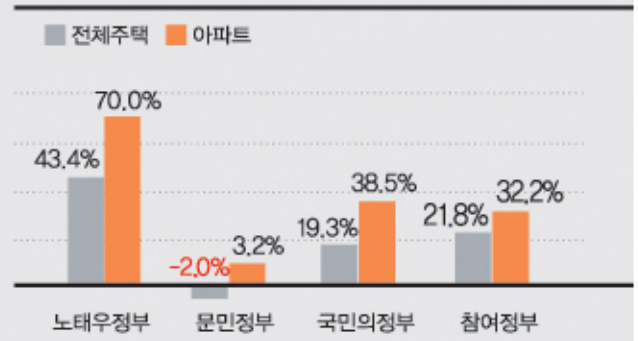
2001~2006년 주요 국가 집값 상승률(%, 출처:Global Property Guide)



지난 5년 집값 상승률 추이(%)



역대 정부 집값 상승률 비교



평화가 최선의 안보입니다.
일관된 원칙과 신뢰로 평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06 : 평화와 공동 번영

1994년 '전쟁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냉전논리로 무장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보다 더 심하게 강경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전쟁위기'가 온 다음에야 너무 나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03년, '북폭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부는 '대화와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세우고
일관성있게 밀어붙였습니다.
북한과 미국 양쪽을 설득하고
북한과 미국 양쪽과 신뢰를 쌓아나가는
어려운 작업을 5년 내내 계속했습니다.
'친북좌파', '퍼주기', '안보무능' 등의 욕설을 들어가면서도
'평화를 통한 안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룬 평화는 남북공동번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6 · 15 공동선언은 개성공단을 세웠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선언은 서해평화협력지대, 남북경제공동체를
세울 것입니다.
남북이 서로를 향한 총을 내려놓고 전쟁위기를 없애는 데
경제협력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평화가 공동번영으로 이어지고,
공동번영은 다시 평화를 튼튼하게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한반도 발전전략입니다.

민주정부 10년,
권력은 줄었지만 일은 더 많이 했습니다.

07: 민주주의의 힘

민주정부가 일은 못하고 공무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격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얼마 전 경주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부지 선정 작업을 시작한 지 21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도 결국 풀었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용산 미군기지 이전도
20년 묵은 과제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여러 차례 추진하다 실패한
부동산보유세 정상화, 거래실명제도 실행에 옮겼습니다.
친일파 재산환수 등 과거사의 짐도 대부분 덜었습니다.
민주정부는 과거 힘 있는 정부가 미루거나 손대지 못한 묵은 과제를
대부분 해결했습니다.

민주정부는 권력은 줄이고, 대국민 서비스는 늘렸습니다.
한국 소방관 1명이 불을 끌 때 일본은 2명이,
한국 경찰관 1명이 도둑을 쫓을 때 미국은 2명이 쫓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 5만 8,206명 중
대부분인 84%가 교사, 경찰, 소방관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 공무원들입니다.
이런 일은 민주정부, 선진정부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정부 10년,
그 성과 위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부신 성과, 불안한 미래

한때 수출만 잘되면 선진국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수출 3천 억 달러로 세계 11위입니다.
민주화만 이루어지면 선진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권력의 민주화는 어느 선진국 못지않습니다.
그러나 불만과 불안은 여전합니다.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저출산 · 고령화 등
새로운 숙제들 때문에 생긴 '선진국형 불안' 입니다.

잘못된 진단, 위험한 처방

낮은 성장률이 문제라며 성장률 높이면 해결된다고 주장합니다.
진단도 처방도 틀렸습니다.
그냥 성장이 아니라 어떤 성장이냐, 성장의 질이 중요합니다.
몸무게가 늘어난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면 민생이 나아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상위 10%가 전체의 75%를
종합소득세는 상위 10%가 전체의 90%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은 세금은
교육, 주택, 일자리, 의료, 노후 등
서민복지에 쓰입니다.
결국, 감세의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돌아가고,
감세로 인한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옵니다.

+01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

편법과 반칙이 아니라 원칙과 신뢰가,
비타협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투명한 일류기업도 나오고 소모적 사회갈등과 분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02 성장과 복지는 함께 가야 합니다 +

이제 수출만으로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대기업이 잘된다고
저절로 민생이 좋아지는 시대도 아닙니다. 사람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술혁신, 지식정보 · 서비스 산업의 발전으로 양질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복지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생이 나아지고 국내 시장도 커집니다.
출산, 보육,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노후는 개인과 가정이 알아서 감당하는
개발시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03 평화번영 노선을 일관되게 지켜가야 합니다 +

한반도에 분단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더 이상 '퍼주기', '친북좌파' 운운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 논란에 역량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실마리들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화번영노선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04 책임있는 정부가 유능한 선진정부입니다 +

권력은 줄었지만 정부가 해야 할 새로운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권력남용보다는 정부의 직무유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권력 행사하는 역할은
최대한 줄여나가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역할은 더 확대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 정부의 복지지출은 선진국의 1/4 수준입니다.
작은 정부가 아니라 책임있는 정부가 선진 정부이고 유능한 정부입니다.